



# 미국에서의 過消費에 대한 課稅論議

권영선

재정경제원 사무관/시라큐스대학 유학중

**이** 곳에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외제 차 붐이 일어 TV 드라마에 외제 차 등장하고 부유층 사이에서는 외제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또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과소비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과소비가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학기 미시경제학을 배우던 중 기존의 보편적인 경제학적 이해에 기반을 둔 조세제도과 다른 '누진적 소비세제(Progressive Consumption Tax)'의 도입을 주장한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Robert Frank: 코넬 대학)가 있어 그의 논점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재정학에서 경제학자들 사이에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본적 원칙 중의 하나는 세율체계는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모든 재화와 서

비스에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획일적인 세율이 부과될 때, 과세 이후 재화들 간의 상대가격이 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되어 소비자의 구매행태가 세금부과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때 소비자는 과세로 인해 비싸진 재화는 소비를 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다른 재화를 더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과세에 의한 소비의 왜곡으로 인하여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 이후의 소비자의 소비와 그에 따른 생산을 이상적인 소비와 생산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소비자의 이러한 과세 이전의 소비와 과세 이후의 소비 간의 사회 전체적인 견지에서 경제학 효용(소비자가 느끼는 만족 등)의 차이를 경제학자들은 조세의 '경제적 손실(dead-weight loss)'이라 부른다. 그러나 단일세율을 부과하면 재화간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게 되어 소비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살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 행태를 바꾸지 않게 될 것이고, 따라서 조세부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적 배경하에 80년대 이후 미국정부는 조세개혁의 주안점을 소득세율체계의 단순화와 높은 누진세율의 완화에 두어 왔다. 누진세율의 완화 조치는 높은 누진세율은 개인의 일과 여가 간의 선택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납세자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조치였다.

코넬대학의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는 두 가지 경제학 이론에 근거하여 누진적 소비세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첫째는, 경제학의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고 둘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우선, 첫번째 프랭크의 논의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프랭크는 경제학의 기축을 이루는 개인주의를 부정하기보다는, 개인주의만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소비행



태를 보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개인주의는 근대 주류 경제학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즉, 개인주의는 경제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인이 자유롭게 그의 선호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자발적 소비는 소비자의 만족을 높여주는 것(good)이지 소비자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것(bad)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stable)이어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개인은 그의 선호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그의 소득을 고려하여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므로 개인의 선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중요한 경제적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프랭크는 개인의 소비행태는 그의 선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비행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오래된 이론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개인의 선호에 근거한 소비는 자신의 선호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비(보다 원천적으로는 타인의 선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타인의 소비행태가 변하면 자신의 소비행태도 변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

로 소비와 가치가 결정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영국의 경제학자 허쉬(Hirsch)가 부른 것과 같이 '품위유지財貨'(positional goods)라고 부른다. 이러한 품위유지재의 전형적인 예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치재를 들 수 있다. 품위유지재의 전형적인 특징은 재화의 가치가 그 자체의 용도보다 타인이 구매한 것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품위유지재의 소비행태는 군비경쟁에 비유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품위유지재의 예로는 결혼예물, 과외, 학군의 선택, 비싼 외제차 구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화군에서는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소비자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가격 자체가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된다. 얼마전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를 다루는 기사에서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소비행태를 매우 잘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勝者 全取社會(Winner-Take-All Society)'를 프랭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한 특징으로 본다.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많은 직업영역에 있어서 소수 일등을 한 자는 엄청난 돈을 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소수 프로 스포츠 선수들, 소수 법률가·경영자·연예인 등을 들 수 있다.

승자 전취사회라는 용어는 프랭크와 쿡(듀크대학 경제학자)에 의하여 주창된 것으로서, 승자 전취사회는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

해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한다.

우선 승자 전취사회에서는 쓸모없는 투자가 발생한다.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들이 스타가 되기 위하여 소수 직업군에 몰리게 됨으로써 낭비적 투자가 발생하고, 경쟁자들이 서로가 선두에 서기 위하여 비생산적인 소비와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인력이 고시준비에 수년을 소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견지에서 인력낭비의 좋은 예이다.

승자 전취사회에서는 또한 경쟁자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낭비적이고 아울러 많은 경우에 건강에 해로운 소비와 투자까지를 하게 됨으로써 자원낭비를 초래한다고 한다. 단거리 육상선수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몸에 해로운 약을 복용하게 되고, 보다 예뻐지기 위해 일부 연예인 지망생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일류대학으로의 진학이 향후 소득과 직결될 경우 재수학원이 번창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설명하는 데 있어 外部效果란 개념을 이용한다. 한 경쟁자가 앞서면 전에 앞서 있던 사람은 반드시 뒤처지게 된다. 이러한 경쟁과정에서는 한사람의 추월은 이전 선두주자의 뒤처짐을 의미하므로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경쟁과정의 결과를 '경쟁의 외부효과(positional externalities)'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경쟁에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프랭크는 이러한 승자 전취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진적



소비세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일세제의 도입은 최고 소득자의 한계세율을 반 이상 낮추어 부유층의 낭비적인 과소비를 부추기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승자 전취사회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프랭크가 들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결혼할 때 대개 약혼녀에게 6천달러 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는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정부가 500%의 세금을 다이아몬드에 부과하면 1천달러 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이 6천달러가 되므로 대다수의 약혼녀들은 가격은 전과 같은 6천달러이나 세금부과 전에 받을 수 있던 것보다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약혼녀들의 만족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사하는 신랑이나 작은 반지를 받는 신부 모두 세금 부과로 인하여 잃는 것이 없다. 그런데 정부에 세입으로 거두어진 5천달러는 사회 전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득이다.

프랭크는 누진적 소비세는 고소득층의 납세 후 소득을 낮추어 그러한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과잉경쟁을 완화시킬 것이며, 유능한 인재들이 골고루 다양한 직업군에 분포하게 유도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부의 보다 균등한 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예를 들면, 누진적 소비세를 통하여 부유층이 300평 크기의 집 대신 150평 크기의 집을 구입하고

벤츠나 페라리 같은 값비싼 차보다 값싼 국산 차를 구입하게 될 경우 수천억원의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프랭크가 생각하고 있는 누진적 소비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 프랭크는 연간소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2만달러까지 공제함으로써 소비세제에 누진율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소비세제가 있어 사실상 이미 누진적 소비세제를 갖고 있는 셈이다. 프랭크의 누진적 소비세제의 기본 원리를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휘발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의 문제에 적용해 보자.


휘발유세의 인상은 승용차 이용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원유수입을 줄여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휘발유세를 도로 확충에 투입하면 물류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휘발유세의 인상은 요즈음 문제가 되듯이 저소득층에게 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고 특히 교통체증을 겪지 않는 지방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카터 행정부 때 미국에서는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휘발유세를 인상하면서 휘발유세 인상에 따른 소득 보상을 위하여 동시에 소득세를 낮추어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이 대안에 대한 주된 반대논거는 소득을 보상해 주면 휘발유세 인상의 효과가 상쇄되어 휘발유 소비가 줄지 않을 것이었고 실제 이 대안은 정책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휘발유가 여타 재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싸져 소득보상을 해주었더라도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세 인상의 주목적은 교통난 완화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있다고 알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와 상응하여 소득세의 표준공제를 일정한 인상시켜 주면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휘발유 소비절약과 교통난 완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프랭크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순수 시장경제와 완전경쟁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누진적 소비세제 도입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는 승자 전취사회에 대하여는 많은 규범적 논의를 수반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프랭크의 누진적 소비세제 논의는 선진국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좋은 예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예시하고 있다. 

필자註: 프랭크의 누진적 소비세제와 승자 전취사회에 대한 논의를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 보고자 하는 분은 다음 주소로 찾아가십시오.

<http://www.gsm.cornell.edu/newideas/pressreleases/Frankpr.html>.

<http://www.gsm.cornell.edu/newideas/pressreleases/winnertakeall.html>.